# "남원 공공의대 설립 조속히"

## 이병철 도의원, "의협 반대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 전북이 더 적극 대응 도민께 희망 줄수 있기를 기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남원 공공의대 조기 설립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2020년 의협의 집단 휴진, 전공의·전임의의 업무 중단 등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며 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한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유치전 양상을 띠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이 위원장은 "목포, 창원 등에서 의과대학 설치특별법안을 발의해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면제를 명시했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남원 공공의대의 경우 이미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합의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남원 설치를 결정했던 사안이고, 지난 2021년 12월에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타 지역들은 의대정원 확대가 기본 전제 조건이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의대가 가지고 있던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다"며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당한 근거조차 없는 의협의 격한 반발에 막혀 2년 동안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한다"며 "전남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에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다시 시작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조건이 우위에 있는 우리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연내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확정'이라는 소식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수해대책점검 당정협의회**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민주 최고위원 후보들의 최우선 과제

# 친명 '신뢰 회복' · 비명 '다양성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지난 8일과 10일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놓고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친명(친이명계)과 비명의 대결 구도 속에, 안정적인 지지기반 회복부터 당의 반성과 쇄신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8일과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친명** 서영교 "실력 지도부" 박찬대 "당심 간극 있어" 장경태 "당원 중심 정치" 정청래 "투쟁성 필요"

**비명** 고민정 "다양성 반영" 윤영찬 "비주류도 포함" 송갑석 "새 비전 필요" 고영인 "반성, 쇄신해야"

친명계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력 있는 지도부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야당으로서 강한 투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서영교 후보는 "당이 꼭 해야 할 과제는 안정적인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다.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실력 있는 지도부여야 한다"며 본인을 뽑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후보는 "그동안의 실적과 능력이 평가돼야 한다"며 "제가 행안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총괄상황실장, 법사위원회를 하면서 만들어놓은 실력(이 있다). 이슈는 이슈대로 몰고 실력을 만들어내서 유능하게 소통해내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찬대 후보는 "유능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국민 신뢰의 기반이 가장 먼저 깔려야 한다"면서 의원들과 지지자들 간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당원 게시판이나 문자폭탄 외에는 (간극이 벌어진) 당원들의 마음을 국회와 당으로 전달할 방법을 못 만들었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했다.

장경태 후보도 "정치가 권력인 시대는 끝났다. 소비자 중심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간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은 정치만 하고 있었다. 빠르고 슬림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의 문제는 (야당으로의) 모드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여당인 것 같아 강한 투쟁성이 부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당대회 룰을 아직도 못 고쳤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발 조중동 눈치 그만 보고 야당답게 강한 민주당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비명계는 민주당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주류를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 패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반성과 비전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민정 후보는 "국민의힘을 보고 배우는 게 하나 있다. 당·청의 견제와 균형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만큼 더 반영할 것인가(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후보도 "김대중 총재께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당내 가지고 계셨지만, 항상 비주류를 인정했다"며 "김상현, 정대철 이런 분들이 비주류로 활동하도록 공간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당내 지도부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는 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신호"라며 "당내서도 늘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주당이 정말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송갑석 후보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던 게 가장 안타까웠다"며 "민주당의 비전과 가치, 새로운 철학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영인 후보는 "제대로 평가하고 반성하고, 필요하면 책임지고 쇄신하는 게 상식"이라며 "평가와 반성이 지체되거나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이준석, 국힘 비대위 전환 반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전자로 접수" … 13일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힐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치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이 대표는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전국위에서 임명안이 가결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은 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역시 당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 걱정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에게 연락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뉴시스

# 지자체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적극 설치 길 여나?

## 민주 윤준병 의원, 충전시설 설치 확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0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배달을 통해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이 크게 증가했다.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중에서도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보다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그 소음이 커서 길거리 공해의 주범이자 주택가 민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하도록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러한 정책에 부응해 많은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자동차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전업 배달용 이륜자동차로 등록된 3만5,000대 모두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례 없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연료비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 사용이 유류 소비 절감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 충전이나 전기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는 충전시설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들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현행법상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를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 점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규정에 다시 한번 명시해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확실히 세움으로써,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및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